

총선 '양지' 물리는尹정부 사람들... 영남서만 예비후보 20명

경북 구미읍, 참모간 맞대결도
18개 지역구 부산도 인사 몰려
서울·경기·충남 등서도 도전

국민의힘이 4·10 총선 후보 공천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들이 '양지'에 대해 물리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 참모나 장·차관 출신 인사 20여명이 영남에 후보 등록을 했다. 영남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현역 인지만, 현역의원과 집권 정부 출신 인사들의 싸움이 이뤄지는 것이다.

일단 경북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대통령실 인사는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김찬영 전 행정관(구미갑), 이부형 전 행정관(포항북), 이병훈 전 행정관(포항남·울릉), 조지연 행정관(경산) 등이다. 한창섭 전 행정안전부 차관(상주·문경),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김천), 윤종진 전 국가보훈부 차관(포항북)도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구 현역은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3차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부분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이다.

심지어 대통령실 참모끼리 맞붙는 지역도 있다.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과 허성우 전 국민제안비서관이 선택한 경북 구미읍이다. 이곳은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초선)의 지역구다.

18개 지역구로 나뉜 부산에도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들이 몰려들었다. 부산 중·영도에는 박성근 전 국무총리비서실장과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 곳은 국민의

힘을 탈당한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해 자리가 비어 있는 곳이다.

서울로 자리를 옮긴 하태경 의원의 지역구였던 부산 해운대갑에는 윤 대통령의 측근이자 검사 출신인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출마 의사를 밝혔고, 부산 서·동에는 김인규 전 대통령실 정부수석실 행정관, 부산진읍에는 김유진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사하읍에는 정호윤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

서관실 행정관, 연제에는 이창진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등이 도전한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인사 중에 영남 출신이 많기에, 연고를 감안해야 한다는 반박이 나온다. 정부 출신 인사라고 해서 무작정 연고 없는 지역으로 갈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영남권 외에도 서울, 경기, 충남 등의 지역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양지'인 곳에도 도전하는 윤석열 정부 인사들도 있다.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은 충남 홍성·예산에 도전하는데, 이곳은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다.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자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서울 송파갑 출마를 선언했다. 또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서울 강남갑, 이원도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은 서울 서초에 거론된다.

일부 참모들은 더불어민주당 현역 지역구에 출마를 검토 중이지만, 해당 지역은 당선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다. 김은혜 전 홍보수석은 경기 성남분당을 출마가 거론되는데, 이곳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표가 더 많이 나왔다. 현재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해당 지역구의 현역이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장관이 선택한 서울 영등포을도 현재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현역이지만, 지난 총선에서 5% 포인트 정도의 표차가 난 '스윙 스테이트'다.

박 전 장관이 "힘지 출마를 결심했다"며 영등포을을 선택하자,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한 국민의힘 인사는 "영등포가 힘지면 관악·금천·구로는 힘지를 넘어 지옥이냐"고 꼬집었다.

수도권 출마를 준비하는 한 예비후보는 "‘윤심’을 앞세워 양지를 찾아다니는 모양새를 국민께 보여주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그런 모습은 오히려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는 것 아니겠나. 그리고 그게 정말 대통령의 뜻이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대통령실·정부 관료 출신이라고 해서 공천이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도부가 '김기현 체제'에서 '한동훈 체제'로 바뀌면서 공천 분위기도 전환됐다는 의미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與,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압박... 野, 전 당원 투표 준비

(가칭)

與, 창당 발기인대회... 병립형 입장
野, 권역별 병립·준연동형 갈팡질팡

22대 총선에 적용될 비례대표제 방식이 총선을 두달을 남겨놓고도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창당 준비로 민주당을 압박하고, 민주당은 당의 선거제 방안을 모든 당원에게 묻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이 의석수와 연동되기 때문에, 다당제의 출현과, 득표율과 의석수의 간극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지를 받는 거대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수의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21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민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제 선거를 위한 위성정당을 창당해 지역구 의석을 보존하고 비례대표 의석도 확보하는 '꼼수'를 부렸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비례대표 19석과 17석을 차지한 후 본 정당과 합당했다.

여야가 선거제 개혁안을 합의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실시되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대비해 또 다시 위성정당을 창당 준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온라인상에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가칭)'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이미 21대 총선까지 사용했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자고 당의 입장을 정해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사이에서 당의 입장을 정하지 못하자 위성정당을 창당해 민주당을 압박하는 분위기가.

선거제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를 통해 당의 입장

을 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당 대표가 "벗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회귀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지만, 이미 이 대표가 당 대표 출마 시 비례민주주의 강화와 위성정당 금지를 선언하지 않았으며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도 거세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77.77%의 득표율로 당 대표에 당선될 정도로 당심이 이 대표에 쏠려 있는 만큼, 당 지도부의 의중대로 비례대표제 방식이 결정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제3지대와 당의 원로들은 일제히 이를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다.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1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당원 투표가 제일 불길한 것"이라며 "히틀러도 국민만 보고 간다고 했다. 독재자가 항상 하는 소리다. 민주당이

못된 짓은 다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2021년 재·보궐 선거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를 공천할지 여부를 전 당원 투표를 통해 확정할 적이 있다. 당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였기에 파장이 일었다.

박원석 개혁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이던 2022년 2월 14일, 명동유세에서 '민주당이 누려온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겠다'며 비례대표 확대, 위성정당 금지를 약속하고 피해입은 정당에게 사과했다"며 "하지만 약속의 시한은 1년 정도에 불과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벗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수차례 공언과 약속이 속임수였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민주당 "철도·GTX·도시철도 지하화"

도심구간 상부개발, 랜드마크 건설
시민추진단 구성, 노선 선정 등 수립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전국의 철도·GTX(광역급행철도)·도시철도의 도심구간을 지하화한 뒤 상부를 개발해 지역 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4대 약속·4대 실천' 자료에 따르면, 당은 관련 공약으로 ▲철도, GTX, 도시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철도 지하화 부지 상부 개발 ▲복선화 및 철도망 용량 확대 ▲경제성 외 균형발전, 행복추진권 보장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발표한 철도지하화 구간은 수도권·부산·대전·대구·호남 등 광역도시권이 포함됐다. 특히 수도권은 ▲경인선(구로~인천역) ▲경원선(청량리~도봉산~의정부역) ▲경의선(서울~수색역, 수색~문산 도심구간) ▲경의중앙선(용산~청량리~도심역) ▲경춘선(청량리~신내역, 춘천역 도심구간) ▲경부선(서울~의왕~수원~병점, 천안 도심구간, 평택 도심구간)을 지하화 추진 구간으로 선정했다.

수도권 도시철도 또한 ▲2호선(신도림~신림역, 한양대~잠실역, 영등포구청~합정역) ▲3호선(신답~성수역, 옥수~압구정역) ▲4호선(금정~

산본~수리산~대야미역, 상록수~중앙~고잔~초지역, 동작~이촌역) ▲7호선(쌍문~당고개역) ▲8호선(건대입구~청담역)이 지하화 추진 구간으로 포함됐다.

GTX-A~C 구간은 운정~동찬, 인천대입구~마석, 덕정 수원 구간이 지하화 대상 부지로 선정됐다.

민주당은 지하화 부지의 건폐율과 용적율을 높이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을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또, 지하화·통합개발 시민추진단을 구성해 노선 선정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여당도 철도 지하화에 관한 공약을 한 것 같다.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고 하지 말고, 지금 하라. 저희도 곧바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尹 "비급여·실손보험제도 등 개혁"

>> 1면 '의료개혁 골든타임'서 계속

의료인에 공정한 보상체계 도입
지역의료 재건 중요 과제로 꼽아

이를 달성하기 위해 윤 대통령은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의료사고 관련 제도 전면 개편, 의료인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 도입, 비급여·실손보험제도 개혁, 지역의료 재건 등 주요 개혁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보건산업의 수요도 크게 늘고 있어 지역으로, 필수요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아무리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도

실행할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인에 대한 고소 고발이 많지만 실제로 의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며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는 경찰 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모순된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를 전면 개편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투명하게 보상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 pathfinder@